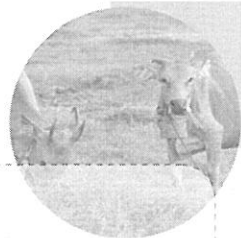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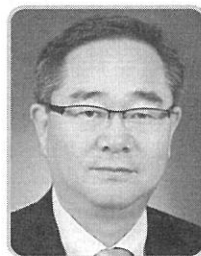


〈특집 I : 국제곡물가격 급등에 대한 분석 및 향후 전망〉



국제 곡물가격 급등에 따른 정책적 대응방안



홍 순 찬
본회 기획조사부장

1. 사료에 대한 정책지원의 필요성

미국, 러시아 등 주요 곡물 생산 및 수출국들의 가뭄으로 국제사료곡물 가격이 상당기간 오를 것으로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축산·사료업계서는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실상 뾰족한 방안이 없어 어려움만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국제 곡물가격 급등에 따른 애그리플레이션(Agriflation) 우려에 대비하고 축산농가와 사료업계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내 놓았다. 사료업계에 대해서는 사료원료구매자금 지원규모를 금년도 600억원에서 내년도에는 950억원으로 확대하고, 축산농가의 사료외상구매를 현금구매로 전환할 수 있도록 500억원 규모의 융자지원을 통해 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완화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자금지원 이외에도 군부대 내 조사료 자원 활용방안, 수입조사료 수입물량 확대, 그리고 국내 농산부산물 등 부존자원 활용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축산업구조가 이미 농후 사료 위주의 전·기업화구조로 전환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사료산업의 경우 역시 해외로부터의 원료 수입의존형으로 전환된 지 오래여서 해외 곡물가격 파동을 감내하기에는 한계에 도달해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최근의 해외 곡물가격 폭등의 여파가 아직 국내 사료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축산업의 경영상황이 한계에 있는 상황인데, 최근의 곡가폭등이 국내 사료가격에 반영되어 사료가격이 오르는 경우 과연 우리 축산업 및 사료산업이 제자리를 지켜 나



갈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향후 국제 사료곡물가격은 단기적인 생산량감소 등에 따른 요인 이외에도 세계적인 에너지정책의 전환과 신흥성장국가들에 의한 소비증가 그리고 소위 비상업적 투기자금이 곡물(농산물)시장에 유입되면서 곡물가격이 예전에 비해 보다 깊고 빠른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에너지정책 변경 전인 2007년과 변경후인 2012년 수입가격을 보면 옥수수가 50%, 대두박이 55% 올라 이 같은 변화를 반증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국제 사료원료 가격의 변동성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사료는 그 존재가치가 축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 축산물의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생산비용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사료비의 안정과 절감이 선결과제이므로 그 동안 축산업 관련 대책들에서 사료비 절감이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어 왔다.

그러나 돌아보면 지난 '95년 UR에서 시작된 정부의 축산수입개방화 이후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많은 정책들이 수립되고 시행되었으나 정작 사료생산비용 저감을 위한, 사료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타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다.

따라서 최근의 곡가폭등은 물론 향후 예견되는 국제 사료곡물 가격의 급변동성에 대응하고 예측 가능한 축산·사료산업의 영

위를 위해서는 축산업의 기초산업인 사료(산업)의 생산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는 정부의 획기적이고 전향적인 정책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 사료원료구매자금의 지원규모 확대 및 금리 인하

우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료산업종합자금(사료원료구매자금)의 대폭적인 증액과 사용금리의 인하가 필요하다. 2011년 기준 사료원료 수입액이 51억 3천만\$, 원화환산 5조 7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사료원료구매자금 지원을 통한 사료기업의 생산비용 저감 및 농가의 사료비 부담완화를 위해서는 최소 1개월 사료원료 수입금액인 5천억원 이상의 자금이 지원되어야 한다.

아울러 사용금리의 경우도 현행의 4% 수준에서 1% 수준으로 낮추어 지원되어야 한다. 이는 동 자금의 금리를 4%(농민의 경우 3%)로 인하할 당시 일반 시중은행의 금리가 6.0~6.5%수준에서 현재는 4.3~4.6% 수준으로 낮아져 있는 바, 정책자금의 지원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최저금리(1%) 수준의 금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더욱이 축산발전기금 사업중 농민에게 지원되는 금리가 1%임을 감안할 때 궁극적으로 농가의 사료비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동 자문에 대해서도 같은 금리적용이 마땅하다.



□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상향 적용

사료기업에 대한 세제(稅制)개선 사안으로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 현재 사료제조업을 포함한 해당 산업부문에 대하여는 2/102(1.96%)의 공제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나 음식점업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6/106(5.66%)의 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사료제조업에 대하여도 음식점업에 적용하는 공제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사료제조업에 대하여 동 공제율이 상향 조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현재의 공제율 2/102가 적정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개방화 시책으로 최대의 피해를 보고 있는 축산업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차원에서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사료제조업에 대한 동 공제율 상향조정이 절실한 이유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세제관련 제도 중에서 그 시행효과가 가장 클 뿐 만 아니라 무역상대국과의 마찰소지가 없는 효과적인 축산업 및 사료산업의 지원정책 수단이라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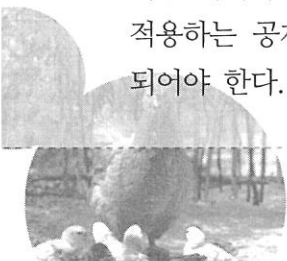
사료제조업체에 대한 항구적인 공제율 상향조정이 지난한 경우라면 과거 타 산업 부문에 비해 사료제조업체에 대해 공제율을 높게 적용한 예가 있는 만큼, 현재와 같은 국제 사료곡물 가격이 안정기조로 들어서는 시기까지라도 한시적으로 음식점업에 적용하는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 농가 사료특별구매자금의 지원

사료(산업)에 직접적인 지원 정책은 아니지만 2008년도 시행했던 것과 같은 농가에 대한 특별구매자금지원도 필요하다. 동 사료특별구매자금의 경우 사료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경영자금 지원정책에 비해 농가의 사료구매 여력을 높여 주는 효과는 있지만 사료의 생산비용 자체를 줄여주는 효과는 없다고 하더라도 농가에 공급된 정책자금이 사료회사의 사료대금으로 조속히 회수되어 사료기업의 유동성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다.

□ GSM 등 정책자금의 경우 금융기관 대출한도에서 제외

사료기업이 원료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담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은 사료기업이 제공한 담보범위 한도내에서 수입신용장 개설을 위한 외화자금 대출을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그런데 국제 사료곡물 가격이 상승해 사료회사의 원료구입비용(즉, 수입신용장 개설한도액)이 증가하게 되면 시중 금융기관은 추가적인 담보제공을 요구하거나 담보제공이 여의치 않은 경우 외화자금 대출금리를 인상하고 있어 이 역시 사료가격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사료기업의 원료수입을 위한 외화대출 시 실질적인 보증한도 확대효과를 위해서는 축산발전기금 또



는 GSM-102자금 등 정책자금은 금융기관의 대출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 사료관리 관련규정의 개선

사료의 품질개선 및 농가의 사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에서는 원료에 대한 수입 제한을 모두 철폐함에 따라 사료제조업체는 자유로운 원료선택으로 최소비용배합을 통해 경제적인 사료를 생산·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사료원료 중 조사료(풀사료)에 대하여는 국내 사료자원 기반확충을 사유로 수입량을 제한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풀사료가 아닌 대두피, 옥대펠릿 등의 원료까지도 수입을 제한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관세법 및 사료관리 규정의 개정을 통해 풀사료가 아닌 원료에 대하여는 자유로운 수입사용에 제한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제 사료곡물 가격급등에 따른 대응방안으로서 수입국의 다변화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나 “아플라톡신”과 관련된 관리규정으로 인해 미국산 옥수수에 비해 경제성이 있는 인도 및 동남아산 옥수수의 수입·사용이 사실상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료원료 수입국 다변화를 통한 사료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제반 여건상 현행의 허용기준(ppb)은 유지하더라도 원료가 아닌 제품(배합사료)에 대하여만 검사대상으로 하는 방향으로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